

전력 수요 98% 늘 때 송전망 26% ↑ … 전력망 확충 시급

호남, 신규 발전 2031년까지 중단…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차질 대한상의 SGI 보고서 “국가기간 전력망 구축 위해 특별법 제정 시급”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기반이 풍부한 전남이 지역 내, 지역 간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에너지 생산에 지장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다. <광주일보 11월 4일 1면>

전남을 포함해 각 지역의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최대 12년 6개월째 지연되고 있으며, 신규 발전허가는 오는 2031년까지 중단된 실정이다. 송전망 부족으로 인해 대규모 정전 발생 우려가 크고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송전망 수요 증가 흐름에 맞춰 호남지역을 비롯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20일 ‘산업계 전력 수요 대응을 위한 전력 공급 최적화 방안’ 보고서에서 “송전망의 적기 확충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로, 지역 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최대 전력 수요는 2003년 47GW(기가와트)에서 2023년 94GW로 98% 증가했으며, 발전 설비 용량은 같은 기간 56GW에서 143GW로 154% 늘었다. 반면 송전 설비는 같은 기간 2만 8260c-km(서킷 킬로미터)에서 3만 5596c-km로 26% 증가하는 데 그쳤다.

무엇보다 송전망 건설 사업마다 평균 5~6년 이상 지연되고 있고 잇따른 사업 지연으로 전력 수요를 충족하지 못할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SGI는 분석했다. 장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345kV 신장성S/S)은 6년 7개월째, 보성군 송전선로 건설사업(154kV 득량S/S)은 3년 11개월째, 영암군 건설사업(154kV 시종S/S)도 2년 넘게 지연되고 있다.

이 밖에 북당진~신당정 345kV 송전선로 사업

(150개월 지연), 동해안~신가평 500kV(66개월 지연) 등 송전선로 지연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지연 사유로는 주민들의 송전 설비 입지 선정 반대, 사업 인허가 시 관계 기관 의견 회신 지연, 지자체의 시공 인허가 비협조 등이 꼽혔다.

SGI 연구위원은 “현행 지역 체계로는 인허가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현실적인 보상 금액을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전력망 부족으로 인해 필요한 전력 수요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송전망 건설 지연에 따라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 발전에 필요한 대규모 전력 공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또 송전망 건설 사업이 뒤로 밀리면서 발전 사업의 성장도 저해되고, 전력 생산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

SGI는 “호남 지역은 송전망 부족으로 올해 9월부터 2031년까지 신규 발전 허가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라며 기존 발전 설비 가동과 신규 발전 사업 진행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했다. 독일의 경우 ‘전력망 확충 촉진법’을 통해 송전 설비가 늘지 못하는 지역의 주민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했고, 미국은 ‘인프라법’을 통해 에너지규제위원회의 송전망 사업 승인 기준을 완화했다. 국회는 전력망 확충 위원회 운영과 인허가 제도의 획기적 개선을 골자로 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안’ 발의된 상태로, 이 법이 통과되면 전력망 확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양수 SGI 원장은 “국가기간 전력망 적기 구축을 위해 현행 건설 체계의 한계를 극복한 국가기간 전력망 특별법의 신속 제정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윤석열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31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및 19차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귀국하며 환송하는 관계자와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G20 정상회담 일정 마치고 귀국

윤석열 대통령은 19일(현지시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다자외교 일정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올랐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 편으로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 갈레앙 공군기지에서 이륙해 서울로 향했다.

지난 14일 페루 수도 리마에 도착한 윤 대통령은 15~16일 APEC 정상회의에서 러시아와 북한 간 불법적 군사협력에 강력히 비판하고 국제 사회에 공조를 촉구했다.

또 계통간 격차 완화, 기후위기 문제 등에 한국이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년도 APEC 의장국으로서 세계 평화에 기여하고 공급망 안정 논의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페루에서 디나 볼루아르테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방문 일정도 갖고 방산 분야를 포함한 협력 확대에 의견을 모았다. 취임 후 중남미 국가를 방문해 개별 양자회담을 개최한 것은 페루가 처음이다.

17일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로 이동한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에서도 러북 군사협력에 대응

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함께 힘을 모으자는 메시지를 발표했다.

아울러 글로벌 기아 빈곤 퇴치 문제, 지속 가능한 개발과 에너지 전환을 주제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을 제시하고 국제 협력을 제안했다.

윤 대통령은 APEC-G20 기간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한미일 정상회의를 열어 3국 협력 체계를 다졌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는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번 남미 순방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을 추진했으나 ‘해의 정상과의 회동이나 만남은 내년 1월 취임식까지는 어렵다’는 트럼프 당선인 측 입장에 따라 회동은 성사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김동연 “이재명 수사 유감…살아있는 권력 수사 문개”

“신 3김·플랜B 거론할 때 아냐”

김동연 경기지사는 20일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살상이 파헤치는 먼지 털이식 수사를 하고 있다”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기소를 비판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 역점사업에 대한 국회 예산 확보 요청을 위해 박정(더불어민주당·파주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문개기 수사를 하는데 공정하고 법치에 맞는지, 민주주의에 맞는 것인지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의 국정 대전환, 특별법 수용, 민생을 위해 (민주당이)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촉구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이 비명(비이재명)계를 향

해 ‘움직이면 죽는다’라는 발언을 한 것에 대한 의견을 묻자 “제가 코멘트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김 지사는 최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된 후 정치권에서 ‘신 3김’(김 지사, 김부겸 전 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민생이 어려운 엄중한 상황에서 ‘신 3김’이나 ‘플랜B’를 거론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에 관해선 김 지사는 “금부세를 바로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고 바로 폐지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는 원칙에 따라서 금부세는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라면서도 “지금처럼 자본시장 선진화 없이 시행하는 것도 답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韓 “가상자산 과세 유예돼야…野 800만 투자자와 싸우겠다는 것”

민주 ‘내년부터 과세’ 방침

한동훈 “많은 보완 작업 필요”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0일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2년 유예를 거듭 주장하면서 이에 부정적인 여론을 비판했다.

한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청년들이 가상자산에 많이 투자하기 때문에 청년들 부담을 줄이고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서 가상자산 과세는 유예돼야 한다”며 “가상자산 특수성상 현재 법제와 준

비 상황으로는 형평성 있는 과세가 어려울 수 있어 많은 보완 작업이 필요하다”고 썼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일각에서 과세 유예 대신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이 제시된 것에 대해선 “민주당은 착각하고 있다. 이걸 국민의 힘이나 정부와 싸우는 게 아니라 800만 투자자들 그리고 청년들과 싸우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민심의 편에 서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끌어냈다. 이번에도 그렇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와 여당은 과세를 2년 유예해야 한다

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을 고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준명 원내대변인은 지난 1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방침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한 대표는 “적극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접법 개정이 산업스파이 수사 등을 통해 국익을 지키는데 제대로 쓰려면 그 법을 적용해 국정원이 수사할 수 있도록 국정원 대공수사권 정상화가 필요하다”며 “국민의힘이 끝까지 쟁기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 240320-중-166683호] [광고]

무릎 통증이 심할때는
첨단우리병원

무릎 관절

인공관절 수술
관절경 수술
- 전,후방 십자인대 수술
- 연골판 수술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970-6000
첨단과학기술원 / 호수공원 앞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갈라강판 지붕공사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옥상스틸방수 전원주택신축 공장신축

건물 리모델링 징크판넬시공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장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